

보도시점 (온라인) 2026. 7. 30.(목) 12:00
(지 면) 2026. 7. 31.(금) 조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

- 7월 31일 착수보고회 개최, 약 8개월간 혁신 계획 수립
- 대전센터 폐쇄에 따른 시스템 재배치 및 대체 방안 종합 설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KT 컨소시엄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자원 혁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착수보고회를 7월 31일(금)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올해 2월 발표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 방향’의 후속 조치다. 지난 6월 조달청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 KT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술 협상을 거쳐 7월 중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부 수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대전센터 폐쇄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재배치 및 대전센터 대체 방안 마련, 국정자원 운영체계 개편 방향 설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 693개 정보시스템 전수 분석 및 보안 등급별 재배치 전략 수립

먼저, 대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693개 정보시스템의 정보 자원 현황과 업무 특성, 국가 망 보안체계(N2SF)에 따른 데이터 등급, 시스템 중요도, 재해복구 구성, 시스템 간 연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별 재배치 전략을 마련한다. 데이터 보안 등급에 따른 배치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 중요도 및 특성, 장비 노후도 등을 함께 고려해 각 시스템의 재배치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기밀(C) 등급은 공공 데이터센터, 민감(S)·공개(O) 등급은 민간 클라우드

>> 2030년 대전센터 폐쇄 대비 대체 모델 도출 및 국정자원 역할 재정립

또한,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 문제를 고려해 2030년 폐쇄 예정인 대전센터의 대체 방안으로 민간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공공 데이터센터 신축 등 가능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한다. 각 대안은 운영 안정성과 보안성, 구축·이전 소요 시간, 초기 투자비와 장기 운영비, 재해복구 체계와의 연계성 등을 기준 삼아 비교·분석해 최적의 모델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시스템이 공공과 민간 시설로 분산되고 인공지능(AI) 활용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확산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가 정보 자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정자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운영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한다.

한편, 시스템 재배치 단계별 이행안(로드 맵)과 대전센터 대체 방안 등 핵심 정책 방향은 올해 연말까지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차별 소요 예산 등의 세부 이행계획은 내년 3월까지 상세하게 설계할 계획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는 국정자원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정부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부실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책임자	과장(직무대리)	김경직 (044-205-2910)
		담당자	사무관	김주평 (044-205-3094)

